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68
----------	-------

발의연월일 : 2021. 11. 17.

발 의 자 : 위성곤 · 소병철 · 윤건영
윤재갑 · 이개호 · 이수진^(비)
이용빈 · 이용선 · 이원택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 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등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 권리보장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소유자들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반려동물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목줄을 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함(안 제8조).

라.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신설).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유실·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

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그 공급에 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사.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분석,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

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7.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에 대하여”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대행위를”을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질병의”를 “해당 동물의 질병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신체를”을 “몸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질병의”를 “해당 동물의 질병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본문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고양시키기”를 “고양하기”로 한다.

4.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폭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遺棄)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반려동물에게 2m이하 체장 3배 이하의 짧은 목줄로 지속적으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제9조제1항제1호 중 “급격한”을 “동물을 포개어 운송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급격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모든 동물은”을 “누구든지”로, “도살되어서는”을 “동물을 도살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동물복지 도축규정 위반행위의 점검과 지도를 위해 사용·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보호시설운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동물법의검사 의뢰)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동물실험의 원칙”을 “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를 “실험동물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동물실험의 원칙에”를 “실험동물의 사육, 수의학적 관리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 등 동물실험의 원칙과 이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유”를 “사유(해당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위원회(IACUC)표준운영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제4조제4항에”를 “제4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실험동물의 공급)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실험동물의 공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8조의3(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 실험시설관리자에게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기록하도록 하고, 실험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고 및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법과 이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실험시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기관의 장은 신고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은 윤리위원회가 즉각 조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동물권리보장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

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

② 동물권리보장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물권리보장원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권리보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동물권리보장원의 이사회는 동물보호와 복지, 동물윤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동물권리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분석
 2.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원
 3.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실험시설, 축산농장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평가
 4. 동물학대 방지와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대한 지원
 5. 영업자에 대한 점검 지원
 6. 동물 관련 해외 정책조사 및 사례분석
 7.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⑦ 동물권리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를 “제33조에”로, “하거나”를 “하지 아니하거나”로, “받거나”를 “받지 아니하거나”로, “한”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8조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로, “영업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5.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5의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물을 죽인 자

- 4의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
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p> <p>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p> <p>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
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
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
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
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
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
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
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
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
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
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
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
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
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 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7.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동물 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4.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
-----행위를-----
-----.

1. -----

-----해당 동물의 질병의-----

---.

2. -----
몸을-----

--해당 동물의 질병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폭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遺棄)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반려동물에게 2m이하 체장 3배 이하의 짧은 목줄로 지속적으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⑤ -----
-----.

1. -----제4항까지(제4항 제1호는 제외한다)-----

-----고양하기-----

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 략)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
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
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
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
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
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
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동물의 운송) ① -----

-----.

1. -----
-----동물
을 포개어 운송하지 아니하도
록 하며, 급격한-----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
든지-----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
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등을 통하여 도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동물복지 도축규정 위반행위의 점검과 지도를 위해 사용·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p>⑤ <u>보호시설운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u></p> <p>⑥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⑦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16조(신고 등) ①·② (생략)	제16조(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p>③ <u>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u></p>	<p>③ <u>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u></p>

<p><u><신 설></u></p> <p>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② (생 략)</p> <p>③ <u>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u></p> <p>④ ~ ⑥ (생 략)</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동물실험의 원칙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p>	<p>제16조의2(동물법의검사 의뢰)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법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실험동물의</u>----- ----- ----- -----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u>실험동물의 사육, 수의학적 관리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 등 동물실험의 원칙과 이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u>-----.</p> <p>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p>
---	--

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사유(해당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
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
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에 한정
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위원회(IACUC)표준운영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1. (생 략)

2.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3항에-----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실험동물의 공급) 동물 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실험동물의 공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신 설>

<신 설>

제1항을 적용한다.

제28조의3(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시설관리자에게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기록하도록 하고, 실험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고 및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법과 이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실험시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기관의 장은 신고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은 윤리위원회가 즉각 조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3(동물권리보장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

② 동물권리보장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물권리보장원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권리보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동물권리보장원의 이사회는 동물보호와 복지, 동물윤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동물권리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분석
2.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원
3.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실험 시설, 축산농장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평가
4. 동물학대 방지와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대한 지원
5. 영업자에 대한 점검 지원
6. 동물 관련 해외 정책조사 및 사례분석
7.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제46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

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동물권리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동물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3. 제33조에-----

-----하지 아니하거나---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에 영업을 한 영업자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⑤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받지 아니
하거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3조에-----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자

5.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
한 자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p><u>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u></p> <p><u>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u></p> <p>4.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5. ~ 15.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u><삭 제></u></p> <p>4. (현행과 같음)</p> <p><u>4의2.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u></p> <p><u>을 위반하여 고통을 최소화할</u></p> <p><u>수 있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u></p> <p><u>하고 동물을 죽인 자</u></p> <p><u>4의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u></p> <p><u>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u></p> <p><u>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u></p> <p><u>지 아니한 자</u></p> <p>5. ~ 15.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